

# 땡처리업체 점거에 시장판 된 광주 남구청사

캠코가 임대 내준 광주메가몰 1·2층 매장에서 마구잡이 행사 불법 현수막·스피커 소음 난무...“해도 너무한다” 민원 쏟아져 주민 불편·구청 이미지실추 속 캠코측 별다른 대책 마련 안해

광주 남구청사 건물이 땡처리 매장으로 변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구청의 권위마저 실추되고 있다.

광주시 남구에 사는 직장인 문정인(48)씨는 21일 민원접수를 위해 남구청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문씨는 “청사 1층이 땡처리 업체들의 집거로 시장판이 됐다”면서 “청사 1층에 있어야 할 민원실은 온데 간데 없고, 재고 의류와 이불, 신발 등을 파는 매장이 왜 들어섰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땡처리 업체들은 최근 TV와 전단지 등을 통해 ‘남구의 얼굴’인 청사를 배경으로 한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어 남구의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에 찾은 남구청사 입구에는 스피커가 설치돼 소음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날 들어 청사 내 땡처리 의류매장이 하루 평균 2~3건의 현수막 설치 등 불법 광고와 소음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행정력 낭비도 심각하다.

불법 광고물의 경우 4명의 직원이 수시로 수거하고 소음 문제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 청사관리팀이 나가 정문 앞에 설치된 스피커 불륨을 낮추고 있다는 게 남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남구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청사 1층 임대권한을 지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측에 땡처리 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우려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남구 관계자는 “땡처리업체들이 구청 1층에 스피커까지 동원해 행사 홍보를 하다 보니, 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

다”면서 “현재로서는 캠코에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해결 방법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 남구청사 지하1층-지상 4층까지 임대권을 갖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수익을 이유로 땡처리 업체까지 끌어들이는 것을 놓고 주민들 사이에선 ‘공기업이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캠코는 지난 2011년 남구로부터 청사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주는 조건으로 지하 1층-지상 4층의 임대권(2035년 까지)을 건네 받았다.

21일 광주시 남구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광주시 남구 주월동 남구청사 1·2층에서 땡처리 의류판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땡처리 의류판매장은 이날 말까지 운영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캠코가 지난 2017년 광주메가몰과 ‘지하1층-지상 3층’에 대한 임대차(9년) 계약을 맺으면서 생겼다. 광주메가몰이 수익을 위해 이날 한달 동안 지상 1·2층에서 땡처리업체 행사를 진행하면서 각종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남구는 캠코에 땡처리 업체 계약에 따른 관광서 이미지 실추, 각종민원 발생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캠코는 땡처리업체와 계약을 한 광주메가몰과의 연락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확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인 조모(55·광주 남구 봉선동)씨는 “구청 한 가운데서 시장통에서나 하는 행사를 하는 곳은 아마 전국에서도 남구청밖에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23일 광주시 남구청사 내 메가아울렛에서 이른바 땡처리업체들이 우후죽순 입점해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폐점정리를 알리는 대형 광고 현수막이 걸린 남구청 입구.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재활용품, 일반쓰레기와 함께 수년간 매립 광주 쓰레기 배출 시스템 전반적 점검해야”

광주환경운동연합 촉구

광주환경단체가 광주지역 쓰레기 수거·처리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촉구 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최근 광주시 동구의 쓰레기 수거운반업체가 상습적으로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장에 수년간 매립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광주시 위생매립장과 동구청 재활용 선별장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한 점은 총체적 부실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이번 일을 일부 청소노동자들만의 일탈 행위로 국한시켜 책임을 전가시키면 안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업체

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동구 등 광주시 전반의 쓰레기 배출과 수거운반, 처리,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동구는 지난 20일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 대행업체가 동일한 차량으로 쓰레기 관급봉투와 재활용 쓰레기를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남구 양과동 위생매립장에 매립한 사실을 적발됐다.

동구는 향후 대책으로 재활용수거 전담 차량(3.5t 규모) 1대를 증차해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지도점검, 현장 확인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동구에서 발생하는 1일 쓰레기(생활·음식물·재활용 등)는 50t에 이른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추징금 미납에 공매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700만원 낙찰 6번째 공매 끝 매각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51억 3700만원.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의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 등 모두 6건이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 3286만원이었다. 이번 6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 1643만원에 시작, 시작가격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유찰 입찰자 1명이 물건을 낙찰받았다.

이 물건은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처음부터 단점으로 꼽혔다. 게다가 이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더 복잡해졌다.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캠코 측은 “낙찰자 정보는 개인정보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각대금은 추징금과 체납세금 등으로 배분될 전망이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46.7%에 달하는 10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았다. 세금 역시 국내 30억 9900만원, 지방세 9억 9200만원을 체납했다. /연철뉴스

## 전남 다문화학생 대학 진학률, 일반 학생보다 15% 낮아

초·중 과정 기초학력 부진 심각

전남지역 다문화 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일반 학생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초·중 과정에서 기초학력 부진 현상을 보여 학생들의 순탄한 적응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이 전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교를 졸업한 다문화 학생 691명 가운데 479명(69.3%)이 대학에 진학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4명 중 110명, 2017년 231명 중 157명, 지난해 296명 중

212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도내 일반계고 졸업생 대학 진학률은 지난해 86.9% 등 최근 수년간 85~86%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 다문화 학생은 초·중 과정에서부터 학력 부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내 초등학교 기초학력(3R's: 읽기, 쓰기, 셈하기) 미달 학생 1892명 가운데 다문화 학생은 169명으로 8.9%를 차지했다. 중학교에서는 124명 중 27명(21.7%)으로 비중이 커진다.

신민호 의원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다문화 학생 점유율이 높아지고 대학 진학률도 현저히 낮아지는 만큼 학업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며 “통상 다른

피부색 등 외모를 고민할 것이라고 짐작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 학생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학업과 언어 문제”라고 진단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부터 다문화 학생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도교육청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전남도청, 22개 시군과 함께 다문화학생 언어학습 지원 등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전남 다문화 학생은 전체 학생 22만410명 가운데 4.44%를 차지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납품 대가 뒷돈 받은 의혹 나주 모 농협 조합장 수사

농협 하나로마트에 물품 납품을 대가로 조합장 측에 억대의 뒷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나주경찰은 지역 모 농협 조합장 측에서 마트 물품 납품을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나주지역 항간에서는 나주 한 농협 A 조합장과 납품업체간에 농협 마트에 납품을 대가로 현금이 오간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어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에 있는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다”며 “공공연계가 떠도는 나주 모 농협 마트 납품비리가 사실인지 진위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

## ‘윤창호법’ 시행 이후 광주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 광산경찰, 40대 검거 조사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광주에서 처음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광주광산경찰은 21일 음주운전을 하다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로 정모(46)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정씨는 지난 20일 밤 11시10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광

주시 광산구 운남동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A(60)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정씨는 1시간여 뒤 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10km가량 떨어진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서 또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검거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로 측정됐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여수 대형교회 목사가 예배 중 5·18 폼페이 발언 ‘물의’

상대말

○··여수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예배 중 5·18민주항쟁을 폼페이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21일 광주전남기독교교회협의회(NCC)에 따르면 여수 A교회 B목사는 지난달 24일 3·1절 기념 예배에서 “3·1운동은 비폭력 정신이었지만 5·18은 시민들이

총을 들고 교도소를 습격하는 등 끔찍한 폭력이었다”고 주장했다는 것.

○··NCC와 오월 단체는 해당 교회를 찾아 B목사를 항의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했는데 NCC 관계자는 “계속된 사과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